

	보 도 자 료		www.cfe.org
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5년 8월 5일
담 당 자	·자유기업원 김시진 연구원, 고광용 정책실장 ·02) 3774-5006 ·ggy@cfe.org		

세제개편이 증시를 흔들었다…“자본 시장 위축 우려, 정책 혼선이 원인”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고배당 분리과세 신설에도 증시 시총 116조 증발
- 복합적 정책 신호가 투자심리 위축…“세제는 방향과 타이밍이 핵심”
- “조세정의보다 중요한 건 시장 신뢰…개편안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책 혼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와자유 생활밀착2호」에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주주 기준 강화와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이라는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시장은 방향성 혼선을 겪었고,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16조 원 증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 10억 원 환원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법인세율 일부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발표 당일 증시는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정책 불신을 드러냈다.

리포트는 시장의 급격한 반응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조세정의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억 원 기준의 대주주 정의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유발했고, 연말마다 반복되는 회피 매도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명분과 달리 시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고세율이 여전히 35%에 이르고,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김시진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 진흥보다 세입기반 확충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

나는 불신이 크다”며, “세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단일 기준이 아닌 지분율, 보유기간, 실질 지배력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대주주 과세 기준 마련 ▲ 정부안과 달리, 현재 국회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처럼 배당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분리과세 체계 설계 ▲ 정책수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과 타이밍 조율 ▲ 시장과의 사전 소통 및 정무적 일관성 확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의라는 명분보다 자본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메시지가 아닌 단순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점검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의 재설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8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첨부 (별도 파일)

1. 「이슈와자유 생활밀착2호」 새정부 금융부문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